

## 지방에 집 사면 세금 깎아준다

군위 등 83곳 4억 이하 주택 구매 '1주택자' 인정  
기재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발표

인구감소지역 내 4억원 이하 주택을 사도 '1주택자'로 인정돼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에 조성될 소규모 관광단지는 10개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지역특화형비자 할당인원(쿼터)은 현재 1500명에서 2배로 확대하는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방안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이다. 생활인구(하루 동안 3시간 이상 머무른 시간이 월 1회 이상인 사람)와 방문인구, 정주인구를 늘려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취지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경제정책방향 등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대책을

제고했으며 이번에 이를 구체화했다. 정부는 지역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생활인구를 늘리고자 '세컨드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준다. 특히 대상 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이다. 부동산 투기 등의 우려를 고려했다. 다만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과 광역시 군 지역인 대구 군위군 등은 특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89곳 시군구 가운데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 등 6곳을 제외한 83곳이 '세컨드홈' 특례를 받는다.

주택 요건은 공시가액이 4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통상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관련 내용이 처음 발표된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 소유주는 기존에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2주택자 이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사도 '1세대 1주택자' 지위가 유지됨으로써 각종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러한 세제 혜택을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하기 위해 이달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6월에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방문하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소규모 관광단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상은 인구감소지역 중 시·군 지역이다. 인구감소지역 내 관광단지는 지정 요건을 기준 50만㎡에서 5만~30만㎡로 축소하고 필수 시설 요건도 완화한다. 2면에 계속

김경모 기자 jim@kyongbuk.com



수업은 재개했지만... 집단 유급사태를 막기 위해 전국적대 80%가량이 수업을 재개한 15일 오후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대구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한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훈진 기자 jih131@kyongbuk.com

## 정부 "의대 증원·의료개혁 의지 확고"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6월 25학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일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의료개혁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하기 바란다. 정부는 열린 자세로 진정성을 갖고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6월 25학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일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의료개혁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하기 바란다. 정부는 열린 자세로 진정성을 갖고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중대본 회의에서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환자 맞춤형 지원을 위해 2월 19일부터 운영 중인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환자 개별 사례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 시·도, 시·군·구별 피해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2월 19일부터 4월 12일까지 2295건의 상담이 이뤄졌고, 659건은 지자체로 연계한 데 이어 254건은 센터가 직접 법률 상담을 진행했다.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 尹 "국정 우선순위는 '민생 또 민생'" 오늘 국무회의서 총선 입장 밝힐 듯

후임 총리·비서실장 인선 장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총선 관련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이다. 지난 10일 총선 패배 이후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직접 발표하는 총선 관련 메시지다. 별도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을 통한 발표는 없을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생중계 모두발언을 통해 구체적인 국정 쇄신 방향, 자기 국회의 협력 방침 등을 밝힐 예정이다. 특히 입법을 해야 되는 각종 국정과제를 임기 내에 실현하려면 거대 야당과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어느 수준으로 협치 구상을 취할지도 주목된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참모진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향후 인선에 대한 방침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낮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한 총리와 의 주례 회동에서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민생 안정을 위해 공직 사회의 일하는 분위기와 공직 기강을 다시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총선 다음 날인 지난 11일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전한 바 있다. 이후에는 참모진과 국정방향 및 총선 수습책에 대한 내부 논의의 이어왔다. 당초에는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과 같은 방식을 통해 총선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국무회의를 통해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무회의 때 총선 관련 모두 발언을 한다면 따로 대국민 담화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17일 취임 100일 이후 별도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다. 지난 1일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 당시에도 별도 질의·응답은 없었다. 고강도 국정 쇄신의 첫 번째 '가능자'가 될 국무총리·비서실장 인선을 두고는 윤 대통령의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 후보군으로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유력히 거론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의원인 주호영·권영세 의원 등이 거론되지만 아직 가닥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는 최측근이자,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필요 없는 비서실장 후보군을 두고도 하마평이 쏟아지고 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전라권에서 재선한 이정현 전 의원 등 낙선한 정치인과 장제원 의원 유기준 전 의원이 우선 거론된다. 김한길 위원장도 비서실장에 거론된다. 김경모 기자 jim@kyongbuk.com

## 경주시, '2025 APEC' 막바지 유치활동 '올인'

경주만의 '당위성'·'강점' 강조  
경쟁 도시 제주·인천과 차별화  
손님맞이 캠페인 등 본격 전개

경주시가 2025년 APEC 정상회의 유치신청서 제출 시한인 19일을 앞두고 개최도시 선정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쏟아붓는 등 총력을 펼치고 있다. 특히 경주시는 최근 부산이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포기로 3파전이 됨에 따라, 남은 기간 경주와 타 지자체의 장단점을 분석하면서 막바지

유치신청서 작성에 '올인' 한다는 방침이다. 15일 경주시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달 27일 2025 APEC 개최도시 선정계획을 공고했으며, 오는 19일까지 유치신청서를 접수한 후 이달 중으로 서면심사 등을 거쳐 5월에 현장실사와 유치계획 설명회를 가진 뒤 6월에 최종 개최도시를 선정한다. 선정기준은 △유치 목적 및 기본계획 우수성 △국제회의에 부합하는 도시 여건 △정상회의 운영 여건 등의 평가 기준을 활용해 국제회의 개최에 필요한 객관적 기준과 역량을 평가하

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지난 2021년 민선 8기 출범부터 시작한 그동안 AP EC 정상회의 유치 도전 활동을 되짚어 보고, 남은 기간 경주만의 강점과 당위성을 더욱 강조하기로 했다. 특히 경주시는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 공모 일정이다가 오면서 개최도시에 걸맞은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진시민의식 및 손님맞이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등 막바지 유치 활동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2면에 계속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대구시, 내년 국비 4조7000억 목표 2면 | 與, 비대위 거쳐 전당대회 기탁 4면 | 유류세 인하조치 2개월 추가 연장 11면



# 봄, 영양으로 GO!

## 제19회 영양산나물축제

YEONGYANG WILD EDIBLE GREENS FESTIVAL



### 5월9일(목) - 12일(일)

영양읍내 / 일월산 일원

주최: 영양군 YEONGYANG-GUN

주관: 영양축제관광재단 Yeongyang Festival & Tourism Foundation